

社說

정직된 정부의 학원통제 의도

- '학사경고제' 부활에 부처

‘학사경고제’가 부활되게 됐다.

그간 학원내 고질적인 문제의 불씨가 되기도 했던 졸업정원제와 함께 학사경고제가 부활됨으로써 제도상에서 다른 과잉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서둘러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소위 학원의 민주화와 사회·정치문제 등에 형식적 민주화가 확대된다는 학생운동과 학생자치활동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지만 학생의 건부 또는 ‘운동권 학생’의 학과공부 소홀, 결강율 등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심각한 사회문제인 구사안일주의, 향락주의 문화가 학원에서도 팽배해지고 도덕상실이나 개인주의적 자본주의문화의 병폐나 하는 지적들도 많았다. 최근 연학자세와 학과조성의 요구가 부성했던 것을 보더라도 대학에서의 부정적인 모습이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은 아니다. 이러한 이유로 학습 목적의 낮은 학생들에게 학사경고제가 의식의 대전환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새기가 될 것이다. 학과공부를 하지 않고는 학교를 다닐 수 없도록 한다면 비록 강제성을 띠고 하더라도 대학의 학문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임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학사경고제로 인해 대학의 자율적인 면학풍토조성이 다시 제2차 외적경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는 없다. 특히 근래들어 학생자치활동을 하는 학생들 내에서도 수업과 학점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는 등 자율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6·3외대 사건을 계기로 시행된 이번 조치는 정치성을 내포한 사적인 결정으로 보여지는 건해가 지배적이다.

외대 정총리사건은 도덕성과는 무관한 정책과 비리만을 양산해온 정권이 사건의 본질을 덮어 문제 학생들의 도덕성만을 강조하면서 권력에 의한 학원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본당이 진도면 저사임이 아닐 수 없다.

모든 양심수의 석방을 촉구한다

- 민중세력 연행·구속·수배를 바라보며

지난 28일 본교 ‘고향’ 교지 편집위원 4명이 정량리경찰서 보안과 형사에 의해 강제연행됐다. 4개월전 발간된 교지 37호의 프롤레타리아국가 이론, 남한사회 변혁론 등 원고에 대한 조사가 연행유인과 같다. 이들은 교지내용 및 편집위원의 활동 등에 대해 집중수사를 받고 30일 오후 9시 모두 풀려났다.

최근 정부는 거의 모든 재야·민주세력에 대한 탄압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현재 소련사태와 남북한 UN가입이라는 국내외 정세와 6·3외대정권선언이 계속된 탄압으로 위축해 있는 운동대력을 완전히 각색·과소화했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초 김중식전대협 의장, 한철수 전대협 조국통일 학위위원을 비롯한 중앙간부 및 정책위원을 대거 연행, 구속, 수배한 사실만 보더라도 6·3사태 이후 방학을 이용한 전대협 및 학생운동세력에 대한 탄압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정총리가 사건을 과대포장함으로써 아직까지 남아있는 국민들의 유교적인 의식을 부추긴 결과일 뿐이다. 정권식국부총리를 전제왕조시대의 정승이나 스승에 비유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왜 개헌세력을 받아야 했는지를 깊이 생각한다면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 오히려 진정한 스승의 자세였을 것이다.

이번 학사경고제의 부활을 보더라도 대학의 진정한 학문적 발전보다 학생들을 학점에만 매달리게 해서 정치·사회적 관심과 행동을 무마시키려는 의도가 짙게 깔려 있다.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본교에서도 9월중 운영 학사경고제를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학적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신문보도가 나왔다. 이번 학기부터 학생자치기구의 간부장학금 수혜조건을 학점 2.0이상으로 하라는 관계기관의 지시에서도 정부의 학원통제 의도가 나타난다. 이는 작년초 ‘사립학교법’을 제정할 때 앞으로 정부의 대학에 대한 간섭·통제를 강화하려는 일련의 정책추진임을 말해준다.

정권은 더이상 역사의 흐름에 역류하는 대학 통제 및 학생활동 탄압을 중지해야 한다. 학생들에게 학사경고의 기준을 1.5~2.0으로 매긴다면 역으로 정부가 저지른 비리와 정치행태는 경고의 단계를 넘어 제재를 당해야 했다. 학사경고의 화살은 정권에게 다시 돌아갈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대학당국은 전국대학 총·학장협의회와의 결정을 거부하고 대학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제반 교육악법을 학적에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만이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학문·연구의 진전으로 대학을 보호할 수 있다. 정치·사회상황의 변화와 시류에 편승하지 않는 대학 본연의 모습을 지킬 때만이 대학의 권위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앞당길 것이라는 점을 우리 모두 명심해야 한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6공화국 출범이후 1천7백여명의 노동운동 간부가 구속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심지어 노사협상중인 노동조합 간부를 끌고나서 구속시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UN가입을 앞두고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기구들조차 한국의 인권상황을 들추어내는 것을 정한 한국인이라면 모두 수치스럽게 느낄 것이다.

6공정권은 스스로를 민주화세력이나 통일세력이라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폭압적으로 정권을 유지해온 5공화국보다 많은 정치범과 양심수를 가두어놓고 있지 않은가. 그들은 자신의 지배체제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전국민을 대상으로 수배조치를 내릴 수도 있을 것이다.

정권은 민주세력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민중들의 강고한 저항과 청년학생들의 단결된 투쟁이 정부의 존립까지도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양심수와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한다.

사회주의 변혁의 회오리

- 소련 쿠데타의 배경과 실패요인을 분석한다



1. '3일전'으로 끝난 소련의 '보수쿠데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소련의 보수쿠데타는 이제 막을 내리고 말았다. 현 시기 소련사회주의의 총체적 위기를 집약적으로 보여준 이번 쿠데타는 ‘사태발생’ 당시의 충격만큼이나 그 ‘운명’ 또한 충격적이었다. 그러나 비록 ‘3일전’으로 끝난 ‘실패한 쿠데타’에 불과했지만 이 사건의 파장은 소련사회주의의 운명은 물론 국제정치적 파장 또한 매우 심대하다.

그동안 보수파로 통칭되어온 이번 사태의 주역들은 대부분 소련내 국가기구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각료, 군부 지도자, KGB의장, 농민과 노동자대표들 적어도 현상적으로는 상당한 조직력과 대표성을 띄고 있었다. 동시에 유엔에 공식성명을 보내고, 각 언론사 등 주요 국가기구를 장악할 만큼 ‘쿠데타조각의 위력’은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그러한 조직력과 형식적 대표성은 현 단계 소련사회주의의 변화를 결코 강제할 수 없었다.

다. 오히려 자신의 운명을 앞당기고 그들이 그토록 거부해왔던 ‘소련사회주의와 소련공산당의 종말’을 앞당기는 우(遇)를 빚고 말았다.

II. 쿠데타 발생의 구조적 배경과 계기적 사건

쿠데타가 발생한 시기를 전후하여 ‘새로운 연방조약안’(20일)이 체결될 예정이었다. 이 연방조약안은 그동안 탈소련주의적 경향을 보였던 발트3국까지도 체결의 의사를 보일만큼 ‘각 공화국의 자율권을 전면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혁신적인 연방조약안이었다. 이러한 연방조약안은 ‘소련사회주의의 보편’을 강조하는 정통사회주의세력에게는 ‘연방의 해체’로 인식되었다. 실제 이 연방조약안이 체결될 경우 소련사회는 소련국가의 깃발을 달고 있을 뿐 실질적인 정치, 경제상의 자율권은 각 구성공화국의 대통령과 최고회의로 이전되게 될 운명이었다.

실상가상으로 열린 ‘모든 공

과공공기관, 군대에서의 공산당세포조직해체를 발표하면서 소련내 최대공화국인 러시아공화국 내에서는 공산당이 해체되기 일보 직전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요인은 중도개혁세력이라고 하는 고르바초프가 자본주의적인 저항성을 띄는 급진개혁세력의 정책적 연합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서방선진 자본주의의 진영과의 ‘경제적 공조외교’(무상차관, 기술원조 등의 형태를 띤 것으로 이는 주로 보



소련 쿠데타의 배경과 실패요인을 분석한다

단히 높아졌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소련 대중들은 이미 기존 공산당의 정통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형상으로 치달았고, 그 과정에서 자본주의적 의식은 물론 다양한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관념이 뿌리깊게 자리 잡고 있었다. 최근 창당준비위원회를 보았던 기존 공산당의 개혁파인 사들의 모임인 ‘민주개혁운동’도 이러한 다양한 정치세력의 결성에 한 흐름이기도 하다. 결국 소련 대중들은 현 단계 페레스트로

이 예상될 수 있는 국민적 저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중도개혁파의 획득은 물론 보수파의 다양한 세력들을 결집해 내고 동시에 이를 국민대중에게 설득시킬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시종일관 쿠데타 과정에서 두말할 필요없이 이 과거의 보수파와 개혁파간의 정책논쟁과정에서도 막연히 ‘사회주의의 보편’만을 외칠 뿐 대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정책

을 제시하지 못했다. 오히려 민족문제에 대한 유혈진압의 형태를 통해 대중들로부터 더욱 이반되거나, 소모적인 사상투쟁만을 반복하는 우를 범하였던 것이다.

다. 따라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대중들의 경제적 불만은 급기야 ‘새로운 권위의 출발’(신권 위주)을 정향적으로 기대했고 그 과정에서 열친들의 급진적인 개혁안을 선호하거나 혹은 모든 권위를 거부하는 ‘무정부주의적상태’가 사회 전반에 고조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연방의 해체와 소련공산당의 붕괴 그리고 경제적 모순의 심화로 인한 대중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가는 상황이 보수세력에 의한 쿠데타발생의 정치경제적 배경이었다.

III. 쿠데타실패의 요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요인은 소련사회의 구조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의 추진결과 엄청난 정도로 분화발전되었고 이에 따라 대중들의 의식화와 조직화 수준이 대

이카 정책을 전면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지만, 그리고 열친류의 자본주의적 방식을 전격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다수 대중들 사이에는 공유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어떠한 형태의 이름이라도 ‘기존의 스탈린주의적 사회주의 방식’은 거부한다는 것이었다. 바로 그러한 공유된 감정이 이번 쿠데타 추진세력에 대한 ‘단결된 대중투쟁’으로 나타났다. 그 성공의 가능성은 동구권 개혁파 ‘통일독일의 현실화’에서 확인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쿠데타 추진 주체는 주관적인 열망과 낙관적인 정세분석이 지배적이었던 반면, 대중들은 대단히 현실적인 상황판단 속에서 확실한 선택을 주저없이 하려고 했을 수 있다.

다음의 요인은 쿠데타 지도부내의 균열과 ‘보수파’의 거사 목적을 대중적으로 설득해 내기 위한 노력이 대단히 미약했다는 점이다. 그것은 달리 말해서 실질적인 연합세력의 획득을 위한 사전노력이 전무했다는 점이다. 당연히

실현이 가세하면 소련사회주의는 새로운 과국적 위기를 또다시 맞이할지도 모른다.

최성 (고려대 박사과정·정치학)

9월의문화달력

부지런한 9월은 하루가 짧습니다.

고개 숙인 구월입니다. 수정처럼 투명한 가을햇살은 들녘의 오곡이삭들을 통통한 낱알들로 싹찌우고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부지런히 다음 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캠퍼스의 질풍은 잔디도 서서히 황금물결을 꿈꾸고 있겠지요. 서글픈 플라타너스 이따리 몇 개가 넓은 아스팔트 포도에서 이리저리 몸을 뒹굴고 있습니다.

자! 이제, 캠퍼스의 발걸음도 점차 빨라지는 계절입니다. 마지막 꿈을 쫓는 농부의 부지런한 손길로 많은 것들을 보고 더 많은 것들을 느껴야 합니다. 구월은 하루가 짧으니까요.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생활을 알리기 위해 현대그룹이 제공해 드리는 문화달력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나 있으면 행사 전단 25일 까지 현대그룹 문화부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746-2971)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現代

September 1991 9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1 본사대: 민족통일 대중 창고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10/1-10/2)	2 전통국악경연/국악소리 (9/2-9/3)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9/3)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9/3)	3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3-9/4)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3-9/4)	4 전통국악경연/국악소리 (9/4-9/5)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4-9/5)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4-9/5)	5 전통국악경연/국악소리 (9/5-9/6)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5-9/6)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5-9/6)	6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6-9/7)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6-9/7)	7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7-9/8)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7-9/8)
8 본사대: 민족통일 대중 창고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10/8-10/9)	9 전통국악경연/국악소리 (9/9-9/10)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9-9/10)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9-9/10)	10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0-9/11)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0-9/11)	11 전통국악경연/국악소리 (9/11-9/12)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1-9/12)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1-9/12)	12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2-9/13)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2-9/13)	13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3-9/14)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3-9/14)	14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4-9/15)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4-9/15)
15 본사대: 민족통일 대중 창고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10/15-10/16)	16 전통국악경연/국악소리 (9/16-9/17)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6-9/17)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6-9/17)	17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7-9/18)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7-9/18)	18 전통국악경연/국악소리 (9/18-9/19)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8-9/19)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8-9/19)	19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9-9/20)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19-9/20)	20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0-9/21)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0-9/21)	21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1-9/22)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1-9/22)
22 본사대: 민족통일 대중 창고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10/22-10/23)	23 전통국악경연/국악소리 (9/23-9/24)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3-9/24)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3-9/24)	24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4-9/25)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4-9/25)	25 전통국악경연/국악소리 (9/25-9/26)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5-9/26)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5-9/26)	26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6-9/27)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6-9/27)	27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7-9/28)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7-9/28)	28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8-9/29)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28-9/29)
29 본사대: 민족통일 대중 창고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10/29-10/30)	30 전통국악경연/국악소리 (9/30-10/1)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30-10/1)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9/30-10/1)	31 충북대: 가요제/경연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10/1-10/2) 현 서울역대: 민족통일 (10/1-10/2)				